

일본의 과거범죄를 덮어두고 강박적인 미국

은 민족이 격분해하는 일본군성노예문제에 대한 이른바 《합의》의 배후에는 다른아닌 미국이 서있었다. 그것이 얼마전에 다시금 드러났다. 미국은 침략적인 세계지배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일본, 남조선과 3각군사동맹 조작책동에 발악적으로 매달려왔다. 그런데 남조선과 일본을 가깝게 해주는데서 가장 큰 장애물로 되고있는것이 일본의 과거범죄이다. 만인이 분노하는 일본군성노예범죄문제도 그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미국에 있어서 큰 골치거리가 아닐수 없다. 하기에 미국은 남조선과 일본의 좋지 못한 관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그것을 해소하려고 음모양모로 책동해왔다. 수년전 일본을 행각한 당시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미일동맹강화를 떠들면서 공화국의 《핵 및 미사일위협》에 대처한 3각군사동맹의 중요성에 대하여 력설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2015년에는 일본, 남조선집권자들을 워싱턴에 불러들여 그들의 몸값을 높여주면서 력사인식

문제에서의 차이를 없애고 《타협》을 바라는 저들의 립장을 전적으로 따르도록 강박하였다. 미국은 과거 아시아나라들에 대한 침략전쟁인정과 사죄반성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일본의 처사를 비호두둔해주는 한편 친미친일굴종적인 남조선의 이전 박근혜 《정권》에도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더이상 매달리지 말고 빨리 덮어버리며 일본과의 협상의 길에 나서라고 뻔질나게 강박하였다. 박근혜가 미국을 행각하였을 때에도 미국은 《력사를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남조선일본관계의 회복을 바란다.》고 하면서 압력을 가하였다. 미국의 계속되는 압력으로 중지된 박근혜는 남조선 각계의 드높은 반일감정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새로운 력사》, 《신뢰와 우의를 쌓기 위한 노력》을 떠들어대며 일본에 추파를 던지기 시작했다. 수년전 박근혜의 미국행각이 끝난지 며칠 안되어 일본남조선 《수뇌회담》이 열리고 년말까

지 일본군성노예문제를 《합의》하기로 한것은 결국 미국의 찬양품이었던것이다. 미국의 끈질긴 간섭과 부추김에 의해 2015년 12월 28일 남조선과 일본과의 외교장관회담이라는데서 일본군성노예문제와 관련한 빈껍데기사죄와 녹거리자금지출을 골자로 하는 굴욕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당시 남조선의 한 언론이 《합의후 가장 기뻐하는 나라는 미국이다.》고 폭로하고 어느 한 외신이 《합의는 미국의 압력속에 만들어진 정치적선택이라는 측면이 더욱 크다.》고 평한것도 우연한것이 아니다. 지금 미국이 《모든 당사국들이 이 민감한 사안에 치유, 화해, 상호신뢰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함께 노력하고 접근하기를 권고한다.》, 《미국은 강력한 《한》 일관성을 추구하는 모든 노력을 환영한다.》고 떠들고있지만 그것은 굴욕적인 《합의》에 뻔친 미국의 검은 손길을 더욱 드러내보여줄 뿐이다. 본사기자 주 광 일

치욕스러운 《합의》의 리면이 드러났다

최근 남조선에서 《한일위안부합의》에 대한 검토결과보고서발표로 박근혜보수패당이 집권기간 미일상전들과 공모하여 조작해낸 일본군성노예문제 《합의》의 추악한 내막이 드러나 각계층의 분노와 항의를 불러일으키고있다. 보고서에 밝혀진데 의하면 굴욕적인 《12.28합의》가 발표되기 전까지 일본군성노예문제와 관련하여 진행된 량측의 외교부 국장급협의는 형식상에 불과하였으며 사실상 박근혜의 직접적인 주도 하에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리병기가 남조선총대표로 참가하여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었다고 한다. 특히 청와대는 《12.28 합의》에 포함된 《불가역적합의》라는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는 외교부의 의견을 묵살하고 외교부에게 국제무대에서 일본군성노예관련발언을 하지 말라는 황당한 지시까지 내렸다고 한다. 《일본군성노예관련단

체 대한 설득》, 《제3국의 기립비지원중단》, 《성노예표현의 사용금지》 등 일본과 굴욕적인 리면합의를 이룬 흑막도 밝혀졌다. 이밖에 성노예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법적책임과 관련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량측이 사전에 답변을 조절한 문제, 일본의 성노예지원금을 약 858만US\$로 정할 때 피해자들의 의견을 받지 않은 문제 등이 폭로되었다. 그리고 남조선과 일본 사이에 끝을 맺지 못했던 일본군성노예문제에 《합의》를 보게 된것이 다른아닌 미국의 끈질긴 간섭과 부추김에 의한것이였다는것이 다시금 드러났다. 사실들은 일본군성노예문제 《합의》야말로 박근혜보수 《정권》이 미국의 압력과 간혹한 일본에 굴복하여 조작해낸 일대 사기물이며 박근혜보수패당은 민족의 피와 얼이라고는 꼬불만큼도 찾아볼수 없는 천하역적의 무리라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실

증해주고있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사기와 협잡으로 우린 민족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한 일본의 죄악을 무마시킨 박근혜보수 세력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항의로 들끓고있으며 매국적인 《합의》의 전면폐기를 요구해나서고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남조선의 정당들은 이를 《가장 치욕적인 외교참사》라고 략인하면서 전면파기 또는 재협상을 요구해나서고있다. 지금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과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평화나비네트웍》 등 각계층 단체들은 《박근혜범죄자가 저지른 사대매국적인 행태가 날날이 드러난다.》, 《초불의 명령이다. 매국적위안부합의를 즉각 파기하라.》고 하면서 《합의》의 전면무효와 관련자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파렴치한 일본반동들은 《합의는 1mm도 움직이지

못한다.》, 《합의를 변경하려고 한다면 량국관계는 관리불능이 될것이다.》고 오히려 제편에서 큰소리치며 남조선당국에게 압을 가하고있다. 박근혜패당과 작당하여 뒤꼁방에서 협잡문서를 조작하고도 그 내막이 탄로나자 사죄는커녕 오히려 도적이 매를 드는격으로 날뛰는 일본당국이야말로 인륜도 법도도 모르는 파렴치하고 사악한 족속들이며 우리 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수임이 틀림없다. 이번엔 드러난 굴욕적인 일본군성노예문제 《합의》는 박근혜보수세력이 집권기간에 저지른 매국반역범죄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인민들이 박근혜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는것과 함께 역도가 추진한 매국반역정책들의 무효화와 전면철폐를 요구하는 투쟁을 계속 줄기차게 벌려나가고있는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본사기자 리 철 민



《밀실야합, 리면합의! 12.28한일합의 즉시 폐기하라!》

남조선 평화단체 대전에서 투쟁 전개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의 《평화나비대전행동》이 지난해 12월 20일 대전에 있는 성노예소녀상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당국에 굴욕적인 일본군성노예문제 《합의》를 즉시 폐기할것을 요구하였다. 단체는 지난 27일 공개된 성노예문제 《합의》 검토결과보고서를 통해 2015년 12월 28일 성노예문제 《합의》를 남조선과 일본사이의 밀실야합에 의해 이루어졌다는것이 드러났다고 규탄하였다.

발언자들은 2년전 일본군성노예문제 《합의》가 발표될 때 각계가 강도적 《합의》와 다른없는 매국협상이라고 분노를 터쳤다고 말하였다. 이번엔 《합의》 검토결과보고서를 통해 그 굴욕적인 《합의》과정의 전면모가 드러났다고 하면서 그들은 《정부》가 매국문서인 합의문을 전면폐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정부》가 《합의》 폐기와 동시에 조선반도에서 전쟁위기를 초래할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도 폐기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어 기자회견문이 랑독되었다. 회견문은 비공개 《합의》에는 《정부》가 문제의 《최종적이며 불가역적해결》과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의 철거를 위해 노력하며 성노예라는 표현의 사용을 반대할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더욱 경악스러운것은 《합의》가 이루어지기까

지의 과정에 군사동맹강화를 위한 미국의 관여와 압박이 있었다는것이라고 회견문은 폭로하였다. 회견문은 현 《정부》가 일본의 성노예범죄에 대한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과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합의》를 전면무효화하고 《화해, 치유재단》을 해산하며 일본이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제공한 10억불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사기자

통합한당내부이런 필적합당과 기계파싸움

남조선의 《국민의 당》내부에서 새해정초부터 《바른정당》과 통합을 추진하는 통합찬성과 통합반대파사이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이미 알려졌것처럼 지난해말 《국민의 당》은 《바른정당》과의 통합과 관련한 전당원투표를 실시하였다. 《국민의 당》의 당원 20%가 조금 넘는 성원들이 참가한것으로 하여 전당원투표는 저조하게 진행되었다. 이것은 《국민의 당》 당원 대부분이 보수정당인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반대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대표측은 전당원투표에서 통합찬성파가 윌리면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열을 올리고 통합반대파가 이를 거부하면서 새해벽두부터 《국민의 당》의 계파싸움이 본격화되고있는것이다.

지금 통합찬성과인 안철수계는 당규해석 등에 근거해 전당대회 성공적개회를 자신하고있지만 반대파인 호남계는 현 전당대회의 의장이 통합반대파인것을 리용하여 통합을 결사반대해나서고 있다. 찬성과의 한 의원이 2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하여 《전당대회개회는 당무위원회 결정사항이고 전당대회 의장은 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을뿐》이라며 《이를 행하지 않으면 부의장이나 대행에게 전당대회개회를 시키면 되는것으로 당규약을 해석하는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통합반대파인 전당대회 의장이 전당대회개회를 거부하더라도 중립파인 정책위원회 의장 등 부의장에게 전당대회개회를 시키거나 찬성과의원을 대행으로 임명해 전당대회를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안철수의 최측근인물은 어느 한 기자회견에서 《반대파가 통합을 실현할 경우 대항해 전당대회에선 현장투표와 전자투표를 병행하는 방식도 고려하고있다.》고 했다. 한편 통합반대측은 통합을 반대하는 전당대회 의장은 물론 중립파인 정책위원장 등도 끌어당겨 전

당대회개최만은 반드시 지지시키려 하고있다. 지금 통합반대측은 1월말 전당대회개회를 추진하는 안철수계의 계획을 한차례만 지연시킬수 있다면 그 시간동안 대표당원 1만여명중 3분의 1이상의 수표를 받아 전당대회자체를 백지화시킬 확률이 있다고 하면서 그 준비사업을 해나가고있다. 이런 속에 《국민의 당》에서 박지원을 비롯한 통합반대파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박정회의 망령을 되살리는 보수대야합, 적폐통합이라고 하면서 격렬히 반대해나서고있다. 특히 통합찬성과의원들의 일부 보좌진들은 보수와 손을 잡으려는 의원들을 더는 좌할수 없다고 하면서 줄줄이 사표를 내고 전라도 지역의 광역의원들과 기초의원들은 빠른 시일안으로 탈당을 선언하겠다고 하는 등 당내부가 소란하다. 이처럼 《국민의 당》은 지금 통합찬성과파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한 전당원투표가 진행된 이후 본격적인 통합추진에 나서고있는 반면에 통합반대파들은 안철수사퇴와 통합중단을 요구하면서 당내갈등과 분당위기가 한층 격화되고 있다. 본사기자 김 응 철

무엇을 노린 방위비증대인가

일본정부가 올해예산안에 사상최대의 방위비를 편성하고 군사력강화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지난해 12월 1일 일본의 어느 한 언론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올해 방위비를 지난해에 비해 1.3% 더 늘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로써 일본에서는 6년째 방위비가 계속 상승하고있다. 이러한 늘음을 합리화하기 위해 일본은 조선의 《핵, 미사일위협》에 대응하고 중국의 해양진출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생역지를 부리고있다. 일본이 방위비증대를 통해 실제로 노리는것은 군

사대국화와 해외침략이다. 일본을 《전쟁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키려고 평화헌법도 뜯어고치려고 하는 아베정권하에서 방위비가 해마다 대폭 증대되고있는 것도 우연한것이 아니다. 일본방위성은 2018년부터 《JADGE》(탄도로켓의 계도 및 락하지점을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자동경계관리체계)의 성능개량사업에 착수하여 2022년까지 완료하며 이 를 위해 1억US\$를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뿐만아니라 해상배치형 신형요격미사일 《SM-3 블록2A》를 2021년부터 실전배치하고 지상배치형 요

격미사일종합체 《이지스 어서》의 배비를 2021년까지 완료하려 하고있다. 2020년까지 이지스구축함 4척을 추가도입하여 조선동해에서 활동하는 이지스구축함의 수를 현재의 4척에서 8척으로 늘이려고 하고있다. 지상에 배치되어있는 17개의 《패트리오트》 운용부대도 28개로 증강하기로 하였다. 전투기에 탑재하여 지상표적뿐아니라 해상의 함정들도 공격할수 있는 미국산 공중대상 및 공중대해상 장거리순항미사일 《JASSM-ER》(사거리 300여km)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2018년도예산안에

반영해놓는것을 비롯하여 지금 일본의 군사적움직임은 심상치 않다. 일본정부는 독자적으로 지상공격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을 개발하여 《적》기지에 대한 공격능력을 갖추겠다고 떠벌이면서 일본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개발에도 착수하였다고 한다.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을 뜯어고치고 방위비를 해마다 늘이며 무기공동개발 및 수출을 추진하고있는 일본의 무분별한 움직임에 아시아의 주변나라들을 비롯하여 세계가 경계의 눈초리를 돌리고있다. 본사기자 김 련 옥